

2020년 7월 주요 시사

I. 주요시사

II. 시사 파헤치기

I. 주요시사

■ 한국형 뉴딜

한국형 뉴딜정책은 정부가 2020 년 7 월 14 일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글로벌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는 2025 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코로나 19 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 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① 디지털 뉴딜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 ② 그린뉴딜 :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다.
- ③ 안전망 강화 :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 확장성이 있는 사업 등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 대 대표과제가 엄선되었다. 10 대 대표과제를 살펴보면,

- ✓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 디지털 뉴딜
- ✓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마트 그린 산단 -> 디지털, 그린 융복합
- ✓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그린 뉴딜에 해당된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 년 67 조 7000 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 만 7000 개를, 2025 년까지 160 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 만 1000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 대체 복무제 본격 접수 시작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6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4시간 접수하는 병무청 온라인을 통해 신청 첫날부터 지원접수가 잇따랐는데, 이들이 대체복무자로 확정되면 오는 10월 첫 소집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들을 상대로 이달 중순 이후 첫 심사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대체복무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 번째로,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즉 양심의 실체.
- 두 번째,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양심의 진실성.
- 세 번째, 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양심의 구속력.

여기에 대체 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체복무 신청자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도 확인하고, 지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양심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대체복무가 확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 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시설관리 등의 업무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관련 병역법이 지난 2018 년 6 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가 새로 제정되었다.

군 복무 형평성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 끝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달 중순 이후 나올 첫 판단
기준도 국민적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 행정수도이전 로드맵

행정수도 이전은 분원이 아닌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
'완전 이전' 로드맵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당은 거둬 야당과 행정수도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특위를 구성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충청권을 포함해 영남지역 일부 의원들까지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이다.
하지만,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인데, 야당 협조는 미지수다.
미래통합당 의석수는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행정수도=세종'을 놓고 국민의 뜻을 묻자는 '원포인트 국민투표안'도 나오고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여당의 국면전환용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현재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 화두가 던져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10주 만에
반등한 것이 대표적이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7월 5주차(27~31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4%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의 표밭이었던 서울 지역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대구·경북 지역을 앞지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는 56.0%. 대구·경북 지역(55.8%)보다 높은 수치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서울 지역 표심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로 서울 지역에서 민심 이탈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주택공급 대책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슈는 힘이 빠지기 전에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행정수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로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 2021년도 최저임금 협상 결과 및 주요쟁점 (제도시행 이후 역대 최저인상)

2021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시급 기준 1.5% 인상된 8,720원(월급여 환산시 179만 5,310원)으로 결정되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결과란 분석이다.

□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확정 ...역대 최저(1.5%) 인상

금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시급 기준 240원(287%) 인상된 8,590원(월급여 환산시 179만 5310원)으로 결정되었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금년보다 130원(1.5%) 인상된 시간당 8,720원(월급여 환산시 182만 2,480원)으로 결정되며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반대해 투표에 불참

노동자 위원들은 9,430원 안을, 사용자 위원들은 8,500원 안을 제시했던 가운데,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 안을 표결에 부침

인상률로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짐

□ 최저임금 협상 주요 쟁점

(최저임금 인상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 임금인상 폭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림

노동계에서도 인상률을 두고 의견이 갈려, 민노총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7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한 반면, 한노총은 코로나 상황에 '만 원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보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별·업종별·사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도 쟁점화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 상황을 감안해 업종 기업규모에 다른 차등화를 강력히 요구 중이나, 노동계와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차등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지적.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뿐임.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소개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로 매년 6월 말경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및 임금 실태분석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노동생산성산출지표, 소득분배율 지표도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 아젠다넷 (작성 : 2020.7)

■ 코로나19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공급 돌입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임상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 '렘데시비르(美길리어드사이언스社 개발)'가 7월 1일부터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공급. 투약 대상은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로 제한. 관련해 방역 당국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들여와 국내 중증·위중 환자 33명에게 우선 투약할 계획이라고 밝힘. 7월 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두 명에게 처음으로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약.

II. 시사 파헤치기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비 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개선 vs ”비용증가부담“

○ 이슈배경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이 1천 9백여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의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추어 1호 비정규직 제로 공공기관을 표방해온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조치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온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9천 785명의 직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정규직 혹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정규직 전환절차의 합리성 공정성을 두고 찬성과 반대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 찬성 측 이유

1.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 노동 현안 중에서도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다. 대한민국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32.8%(‘16년)라고 한다.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라 한다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37.4%라고 한다. 사회보험 가입율 또한 정규직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2. 정규직 전환 시 부담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민간업체에 고용된 청소(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공공기관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해, 60세 이상 여성 청소노동자를 축삭계약직(준공무직)으로 위촉하는 형식으로 이들을 정규직화했다. 덕분에 서울시 청소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는 이전의 152만원에서 2015년 186만원까지 향상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크지 않았다. 사업비 명목으로 10~15%를 용역업체에 지급했는데, 이를 고스란히 근로자 임금 증진에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핵심은 고용의 '안정' 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책이나 경영진 인사로 정부가 고용 형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곳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따를 수 있는 비용(임금 인상) 문제를 감안해 일차적으로는 신분(고용 형태)만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다. 핵심은 고용의 안정이다.

4. 기업은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

<서울시 청소(환경미화) 노동자 직접 고용>

기업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회사이윤뿐만 아니라 회사 내 직원들의 고용환경, 근무환경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제는 회사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자리 잡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고용자들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 반대측 이유

1.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의 부담이 있다.

비정규직일 때 없던 복리후생, 퇴직금, 수당, 사회보험 등에 따른 비용 확대, 계절적 성수기를 맞는 업종이나 성수기/비수기가 확실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2. 신규 취업자들의 기회가 박탈된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면 일시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나면 해당 기업은 신규 고용을 할 여력이 줄어든다. 정규직 집단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결국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병행하지 않는 정규직화는 일자리 시장의 동맥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 비정규직 채용 절차의 투명화 ▲ 정규직 전환 절차의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

3.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우후죽순 설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방식을 선택하면서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정부 가이드라인처럼 자회사 설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

4.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이 여전히 간접고용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지난 2006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 승무원들이 본사인 코레일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임금은 열악해 '무늬만 정규직 채용'이라며 논란이 됐다.

5.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서로 떠넘길 수 있다.

근로자가 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은 자회사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 처우 개선 요구가 있더라도 자회사의 예산 결재와 승인 권한은 본사에 있어 자회사는 본사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6. 공공기관 자회사 범람이 오히려 민간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산하 자회사는 민간기업보다 인·허가나 승인을 받기 쉽고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시장기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확산방지 필요” vs “진단의 위험성”

○ 이슈배경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 언택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 의료분야에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원격진료는 의사 간의 진료를 제외하고 금지되어있으며, 2010년부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수 차례 시도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 찬성측 이유

정부는 코로나 19확산을 방지에 원격의료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결과 20만여건의 전화 진료가 이뤄졌으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산업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원격의료의 도입이 이뤄졌으며, 원격의료의 도입이 원격의료 관련 진단 기술과 서비스발달,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반대측 이유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이익집단에서는 진단의 위험성과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 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서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판단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오진과 의료사고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어 지역의 소규모 병원과 의원이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다.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로 의료영리화가 자리 잡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비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찬.반

○ 이슈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간 의료인력 편차가 크고, 지역 내 감염내과와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분야 의사도 부족함에 따라 지난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목적 및 현황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며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외 비교 현황)

한국의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 천명당 2.4 명으로 OECD 평균 3.5 명보다 1.1 명 적은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08 년 1.23 명에서 12 년이 지나도록 그다지 좁혀지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15 년간 의대 정원이 3058 명으로 동결됐던 영향이 크다.



(국내 비교 현황)

-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크다. OECD 는 3.4 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3 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1 명, 광주 2.5 명, 대전

2.5 명, 부산 2.3 명으로 그 밖에 지역 경북 1.4 명, 충남 1.5 명, 울산 1.5 명, 경남 1.6 명, 경기 1.6 명과 편차가 크다.

- 이에 지방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돼왔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뇌졸중·응급질환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보건통계 2020' 보건복지부>

○ 추진 내용

▶ 인원 증원 및 지역의사 양성

- 현재 의대 정원은 3058 명으로 2022년에는 최대 400 명을 증원하여 10 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3458 명을 유지한다. 2032 년이 되면 다시 원래 수준인 3058 명으로 감축한다.

- 400 명중 300 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0 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50 명은 의사과학자로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의 차이점

공공의대 신설은 서남대의대 49 명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 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의대정원을 늘려서 배출된 의사는 △ 의사 부족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특수·전문분야 의사 △ 의사과학자로 양성·배치된다.

▶ 지역의사제의 구체적 내용 - 필수 의료 분야 10 년간 근무

-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국가 50%, 지자체 50% 지원)을 지급한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 년간 근무해야 한다.

- 지역근무 의무를 불이행하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를 병행할 계획이다.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은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2022 학년도부터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6 년 후인 2028 년부터 지역의사 배출이 가능하다.

○ 찬성측 이유

1.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

- 코로나 19 로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필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원 증대의 필요성이 확인된 취약지 공공병원의 인력배치가 필요함. 만약 공공병원의 2500 병상 늘린다고 전제하면 최소 4500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고, 취약지 의사 수를 서울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8700 명이 더 필요하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 뒤에도 이들이 현장에 남도록 공공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

- 참고 자료: 대한병원협회,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중간

2. 불법 의료 개선 기여

-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사 업무 중 많은 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A)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PA 의 불법의료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PA 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이다.

-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8 개 대학병원에 속한 PA 는 717 명이다. 병원 한 곳당 평균 90 명에 달한다. 노조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이들 PA 가 처방, 수술, 소견서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가 해야 할 수술 설명, 동의서 작성, 수술 봉합 등 PA 가 의사 업무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다.

○ 반대측 이유

1. 본질은 인프라 부족

- 본질적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지역 배치이다.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지역 인프라를 다지지 않고 인력만 증원해서는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 현재 중증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시골 군단위에 부족하다는 것은 일부 동의하지만 이 부분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모든 시골 군단위까지 대형병원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 보상 시스템 필요

- 의료취약지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공공의대의 경우, 이 대학 학생들은 부속병원 없는 간호대 학생들처럼 실습할 곳을 찾아 전국을 유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현재 비인기 전공을 하는 레지던트 즉 전공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내외과적 처치, 야간 당직, 사회사업팀 연계, 진단서 발급 등 수많은 업무를 맡는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의사 수 전체를 확대하게 된다면 전공의가 전문의가 됐을 때도 결국 전문의 숫자의 과잉을 낳을 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3. 의대 교육 원칙 위반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도 문제.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의대 입학 후 학습을 하면서 특정 분야에 흥미를 갖고 전공을 택하게 된다. 단순히 의사 수를 많이 하고 이들을 강제로 기초의학 분야로 가게 하는 것은 의대 교육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자연스럽게 기초 의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망설임 없이 해당 분야를 택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 이슈배경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되었던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중, 불균형 발전'과 '집값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당의 제안으로 16년만에 재점화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통령부터 대선주자에 이르기까지 여권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 하고 있으나, 야권은 부동산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년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꺼낸 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재점화.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을 기대하며, 국회를 비롯해 추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 이전방안으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며, 야당측에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에 참여를 촉구.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

○ 더불어민주당은 7월 27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완성하겠다며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

민주당은 국회와 청와대 이전 없이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 '대선 이전까지 국회와 청와대 이전 계획을 세움. 민주당은 지역으로의 기관 분산을 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2기 혁신도시'도 균형발전의 투트랙 전략을 제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조만간 확정)

○ 한편 야권은 부동산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 중이나, 미래통합당은 위헌론으로 맞섬. 이에 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정면 돌파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2004년 위헌 결정을 앞세우며 개헌을 반대

□ 관련 쟁점 사안

(행정수도 이전 효과)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유지될 경우,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 이에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지방 분권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개헌 추진 위헌 논란) 16년 전인 2004년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 관습헌법에 바탕을 둔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은 여전한 가운데, 당시 헌재는 헌법을 개정해 수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수도를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관습헌법에 대한 입장과 수도이전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 (당시 헌재는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 국민투표를 거쳐라'는 입장이었지만 현재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할 시, 개헌 국민투표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이전 방식) 행정수도 추진(이전) 방식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 현재 가능한 것부터 이전하는 방식과 개헌,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적 합의 이후에 국회·청와대 등을 한꺼번에 이전해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림

(이전대상 기관) 민주당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 및 나머지 정부부처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보다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 엇갈림. 여당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나 청와대 이전과는 별도 트랙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연말까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표명)

출처 : 아젠다넷 (작성 : 2020.7)